

중소기업 피해, C커머스 직격탄에 속수무책

중기중앙회,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발표... 10곳 중 9곳 피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제 조·유통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알·테·위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98.7%에 달했으며,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라는 중소기업은 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으로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8.0%로 가장 많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의 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신제품을 중국 박람회 출품한 후 C커머스 플랫폼에서 디자인이 유사한 모조품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으나, 기능이나 특허 침해는 없어 법적 대응이 어렵다(서울 소재 화장품 A사, 매출액 50억원).

바이어들이 C커머스 플랫폼의 유사 제품 가격으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계약상사율이 현저히 낮아졌다(경기도 소재 유아용품 B사, 매출액 10억원).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 응답이 7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C커머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71.7%로 반대 28.3%보다 훨씬 높아 건당 150불의 소액물품면세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액물품면세제도는 해외 직구 시 일정 금액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150불이하(미국발은 200불이하) 소액물품에 대해 면세, 미국은 중국발 800불 미만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폐지 → 54% 관세부과(5월), EU는 150유로 이하의 저가 소포에 대해 건당 2유로 수수료 부과 검토하고 있다

(5월).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의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C커머스 플랫폼이 일부 중소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등 역직구 수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는 플랫폼 진입장벽,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기회보다 위기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소상공인·중소기업 3804억원 대출 지원

농협은행 전북본부, '상생 금융' ... 민생 안정 등 활성화 앞장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22일 전주시 완산구 소재 농협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관내 사무소장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경영성과분석 및 하반기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우수 사무소 시상 △상반기 경영성과분석 및 하반기 사업추진 경영관리 방향 논의 △기업금융부문장(부행장 엄을용)의 '기업금융방향 및 추진사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상반기 성과로는 서민·소상공인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하였다고 자평하였다.

전북농협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7억원을 출연했다.

이를 재원으로 1,792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1,630억원은 저리자금과 정책자금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상반기 중 전북농협은 3,804억원의 기업대출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특수채권 34억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등 포용 금융을 실천하며 민생 안정에 힘썼다.

하반기 전략은 현장 중심 경영으로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것이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스마트안전기술로

중소제조현장 중대재해 예방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기반 중소제조 산업예방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모집을 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2024년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라 영세 제조중소기업의 디지털 기반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20개 과제로 과제당 2년간 최대 6.6억원을 지원하며, 작업자 행동 기반 안전사고 예방 등 산업재해 예방 4대 분야별로 영세 제조현장에 대한 예방효과 및 보급확산성이 높은 기술개발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예방 4대 분야는 작업자 행동 기반 안전사고 예방, 위험기계·기구 관리, 화재·폭발·누출·질식 문제 해결, AI기반 안전관리 통합솔루션이다.

이번 사업은 제조현장에서의 실증(field test)을 병행하는 R&D사업으로서 산재예방 장비·솔루션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50인 미만 제조중소기업 2개사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규제자유특구 통해 실증사업 3건 규제개선 완료, 4건 임시허가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조기 규제 개선... 친환경에너지 사업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정부는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유망한 혁신·전략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번 특구위원회의 특례 후속조치로,

특구 내 실증사업을 토대로 조기에 규제가 개선된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2개 실증)의 지정을 해제하고,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1개 임시허가 사업을 종료, 친환경에너지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2개 실증),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2개 실증) 등 2개 특구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완료, 임시허가를 통해 규제개선을 본격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특구위원회는 기존에 지정한 4개의 특구에 대해 부대조건 및 특구사업자 변경, 특구 위치 이전 등 중요 변경 사항을 검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 고시할 예정이다.

전북 특구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전세기체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영향을 활용하여 실증을 추진해 왔다.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소 실증과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을 통해 관련 규제가 개선되어 특구지정을 해제하게 되었다.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소는 그간 항만에서 이용되는 야드트랙터에만 허용되어 일반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는 충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왔다. 전북 특구에서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자동차에 대한 LNG 충전의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5월 1일)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동식 LNG 충전이 가능해졌다.

또한 청소차, 소방차 등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그간 자동차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운행이 불가능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바이오 기관-기업 소통포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22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 바이오 기관-기업 소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 소통포럼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함께 공동으로 열어 바이오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북

지역 바이오 창업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모여 도내 바이오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협업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 유튜브 채널 '일리버'를 통해 제약바이오 투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강하나 작가를 초청

하여 '제약바이오 트렌드와 현황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지역클러스터 기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방향에 대해 모색했으며, 추후 산·학·연·병 연계를 통한 자원 활용 확대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자문회의

전북 광역지원기관, 지역특화지구 지정·정책 연계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농촌의 소멸위기와 난개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근거해, 한 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전북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광역지원기관은 지난 18일 농촌공간계획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북 지역협의체'와 함께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4월 출범한 지역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으로, 장수군·

남원시·임실군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자문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농정방향,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지구 지정과의 연계성, 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시 부문간 시너지 창출 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농촌 특화지구 지정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으며, 농촌마을보호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세부 지정 유형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병행됐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